

弘報室 : (02)
6050-3442~6

이 자료는 4/19(月)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통신, 인터넷 등은 4/18(日) 12:00 부터

※ 문의 : 지속가능경영센터 김녹영 센터장(02-6050-3804), 이시형 과장(02-6050-38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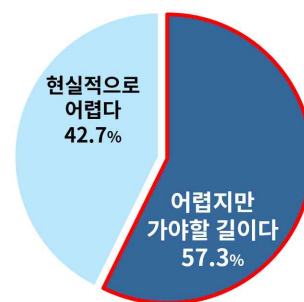
기업들, “2050 탄소중립... 가야할 길이지만 당장은 위기요인” 평가

- 商議,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대상 ‘탄소중립에 대한 국내기업 대응실태’ 조사
- 2050 탄소중립... ‘어렵지만 가야할 길’(57%) vs. ‘현실적으로 어렵다’(43%)
- 기업 경쟁력... ‘경쟁력 악화 위기’(59%), ‘업종 존속 위기’(15%) vs. ‘경쟁력 강화 기회’(26%)
- 정책과제 : ‘감축투자 지원’(37%), ‘脫탄소 혁신기술 개발’(31%), ‘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’(15%) 順

국내기업들은 ‘2050 탄소중립’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보면서도 당장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)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중인 기업(684개사 중 403개사 응답)을 대상으로 ‘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’를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의 57.3%가 2050 탄소중립을 ‘어렵지만 가야할 길’로 평가했다. 이에 비해 ‘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’는 기업도 42.7%나 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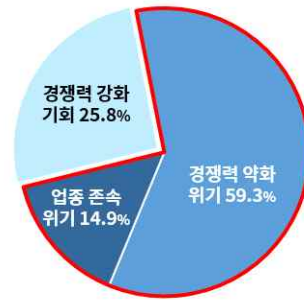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평가



탄소중립(net zero)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(배출량-흡수량)을 ‘0’으로 하겠다는 목표다. EU·일본이 2050년,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공언한 상태다. 한국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.

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당장에는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.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'경쟁력 약화 위기'(59.3%) 또는 '업종 존속 위기'(14.9%)라고 응답한 기업이 74.2%를 차지했다. '경쟁력 강화 기회'라고 보는 기업은 25.8%에 그쳤다.

<그림 2>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



- 응답기업 2/3는 탄소중립 대응하거나 계획중... 1/3은 아직 대응 못하고 있어

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.8%는 탄소중립 정책에 '대응 중'(31.0%) 또는 '대응계획 중'(33.8%)이라고 답했다. 반면, 35.2%는 '대응하지 못한다고 있었다.

탄소중립 대응에 나선 기업은 그 이유로 규제를 주로 꼽았는데 '현재의 규제'(39.0%) 또는 '규제강화 대비'(21.7%)가 60.7%를 차지했다. 'ESG 실천'(16.9%), '경쟁력 강화'(12.5%), '공급망 등의 요구'(5.2%), '기후위기 대응 동참'(2.9%) 등 적극적 이유로 대응한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. <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1.8%>

대응 내용으로는 '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투자'(75.5%)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외 'RE100 등 이니셔티브* 참여'(9.3%), '외부감축사업 추진'(7.6), '탈탄소 기술개발 참여'(7.2%) 등이 뒤를 이었다. <기타 0.4%>

* RE100(Renewable Energy 100) : 기업들이 100%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, 구글, 아마존, BMW 등 29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SK, LG화학, 아모레퍼시픽 등이 선언

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'비용 부담'(41.7%), '감축방법 부재'(31.3%), '우선순위에서 밀림'(22.2%)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. <기타 4.8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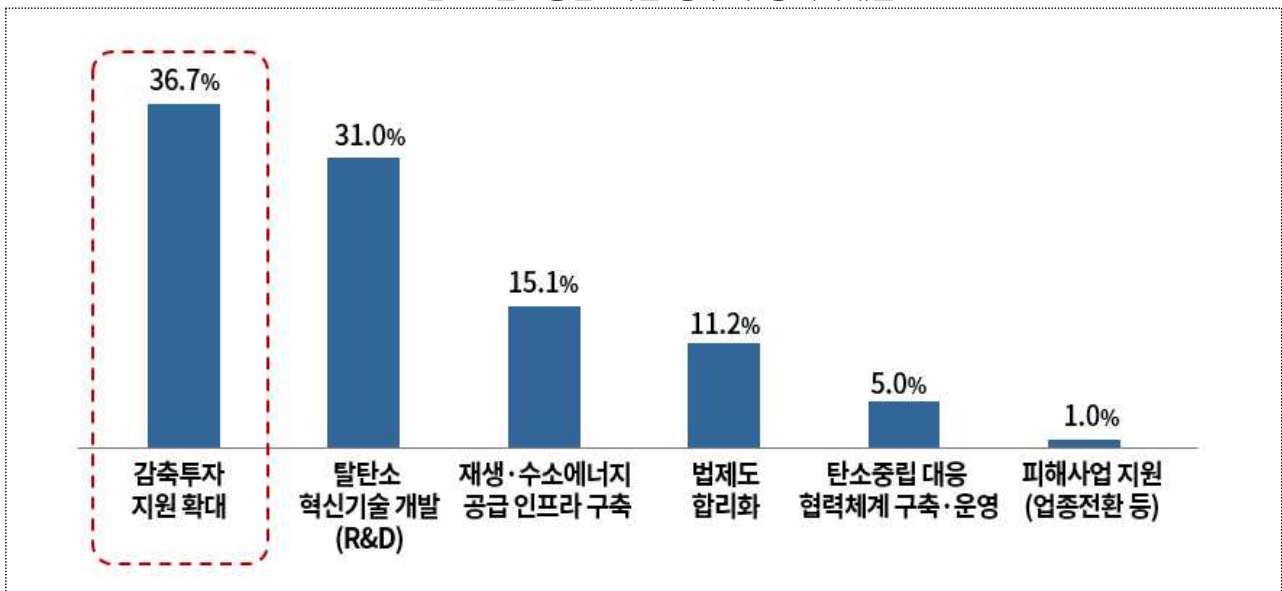
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"발전·수송 부문과 달리 산업 부문은 아직 탈탄소 혁신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"이라며 "탄소제로가 최종목표이지만 현재는 점차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"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.

- 기업들, 다양한 R&D 과제 필요... 정책과제로 '감축투자 지원', '혁신기술 개발' 등 요청

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(R&D) 과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. '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기술'(24.8%)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'공정가스 대체·감축 기술'(22.5%), '에너지효율 향상 기술'(22.2%), '자원순환 기술'(17.5%), '탄소포집·활용·저장(CCUS) 기술'(13.0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로 '감축투자 지원'(36.7%)과 '탈탄소 혁신기술 개발'(31.0%)을 요청한 기업이 많았고, 이어 '재생·수소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'(15.1%), '법제도 합리화'(11.2%), '협력 네트워크 구축'(5.0%)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. <피해사업 지원 등 1.0%>

<그림3> 탄소중립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?



한편, EU와 미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가 시행된다면 73.7%의 기업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.<영향 없을 것 26.3%>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.

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“이번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을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탄소감축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”면서 “탄소중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은 신재생에너지의

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혁신기술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R&D 지원과 함께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🇸🇰

< 조사 개요 >

- ▷ 조사 기간 : '21.3.29 ~ 4.5
- ▷ 조사 대상 :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전수조사(684개사 중 403개사 응답)
- ▷ 조사 방법 : 전화, e-mail, 팩스